



2017. 12 제94호 (17-29)

민선7기 경기도에 바란다 : 청년정책

양 정 선 가족행복정책부 연구위원

남 승 연 여성동행정책부 연구위원

1. 경기도 청년 현황
2. 경기도 청년 생활실태
3. 중앙정부 청년정책
4. 민선 7기 경기도 청년정책 제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94호(17-29)

발행일 2017년 12월 28일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 쇄 지원디자인 (031-8065-6858)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음.

※ 「이슈분석」은 가족여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gfwri.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22)

요 약

○ 경기도 청년 현황

- 경기도 청년인구 비중은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이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인구의 41.4%는 청년인구임.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청년 니트는 한국의 경우 특히 고학력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20~30대 청년의 고용률은 40대에 미치지 못함.

○ 경기도 청년 생활 실태

- 구직 경험이 있는 청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의 장기 구직 경험을 갖고 있으며, 16.9%의 청년이 나의 적성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적성과악의 선결과제를 보여줌.
- 조사 대상자의 21.9%가 현재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인은 교육비(48.3%)가 가장 많았고, 주거비(36.5%), 생활비(28%) 마련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 청년의 79.1%가 장거리 통학 및 통근자임.

○ 중앙정부 청년정책

- 중앙정부 청년정책은 일자리 지원 정책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양분되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 도입 및 확대, 청년 과학기술인력 및 농업인 양성 정책 추진, 청년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계획 중임.
- 무엇보다 새정부 청년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강한 방점을 찍고 있으며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청년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민선 7기 경기도 청년정책 제안

- 경기도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에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틈새 영역에 대한 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년정책은 영역이 아닌 대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경기도에서는 청년 대상의 전방위적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정책 설계 · 추진 및 환류의 전 과정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기회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①수요-공급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②청년 창업 지원, ③청년 생활안정 지원, ④청년 문화 · 여가지원의 4가지 정책영역별 세부사업을 제안하였음.

목 차

1. 경기도 청년 현황	1
가. 청년 인구	1
나. 청년 고용	3
2. 경기도 청년 생활 실태	5
가. 취업 및 향후 진로	5
나. 주거 및 교통	7
다. 경제생활	8
라. 여가 및 문화생활	10
3. 중앙정부 청년정책	11
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11
나. 청년 주거부담 경감	12
4. 민선 7기 경기도 청년정책 제안	13
가. 수요(기업)—공급(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13
나. 청년 창업 지원	15
다. 청년 생활안정 지원	17
라. 청년 문화·여가 지원	18
마. 청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구축	19

1. 경기도 청년 현황

가. 청년 인구

“경기도 청년인구 비중은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이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인구의 41.4%는 청년인구임”

- 경기도 청년인구는 2017년 1월 현재 약 337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6.5% 규모에 달함. 청년인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고, 경기도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청년인구 수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1〉 전국 및 시·도별 청년인구¹⁾와 비율 변화 추이

(단위: 명, %)

행정구역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1월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국	15,729,976	34.2	14,530,775	30.9	13,728,131	28.6	13,195,411	26.5	13,365,227	25.8
서울특별시	3,728,131	37.8	3,403,681	34.9	3,075,927	31.9	2,770,567	29.0	2,776,839	28.0
부산광역시	1,268,750	34.7	1,087,684	31.0	957,321	28.2	881,302	25.9	865,611	24.8
대구광역시	875,283	35.4	769,023	31.3	692,133	28.5	642,154	26.4	640,849	25.8
인천광역시	833,012	33.8	786,643	31.2	779,605	29.6	768,700	27.2	790,801	26.9
광주광역시	504,400	37.3	473,935	33.5	452,430	30.9	423,705	28.6	406,973	27.7
대전광역시	496,648	36.4	480,321	33.4	465,604	31.2	444,942	29.3	417,109	27.5
울산광역시	345,938	34.2	315,599	30.2	304,063	28.4	310,171	27.3	316,349	27.0
세종특별시	—	—	—	—	—	—	53,497	26.8	59,431	24.3
경기도	3,015,122	33.7	3,199,780	30.9	3,246,795	29.0	3,226,691	26.8	3,376,584	26.5
강원도	465,546	31.4	404,623	27.7	372,280	25.4	364,763	24.3	362,050	23.4
충청북도	480,719	32.9	425,774	29.3	408,748	27.3	403,078	26.0	395,520	24.8
충청남도	568,554	30.9	537,490	28.6	549,577	27.5	524,775	25.8	506,406	24.1
전라북도	600,728	31.8	489,480	27.5	447,910	25.4	441,032	24.4	440,122	23.6
전라남도	576,498	28.9	430,643	23.7	373,553	21.6	378,705	21.5	422,018	22.2
경상북도	852,737	31.4	717,911	27.7	655,610	25.5	626,033	23.9	616,423	22.8
경상남도	946,285	31.9	855,644	28.1	811,876	26.0	791,920	24.4	815,075	24.2
제주도	171,625	33.5	152,544	28.7	134,699	25.5	143,376	24.3	157,067	24.5

주: 1) 청년: 15~34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5;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1월)」, 2017.

- 우리나라 청년인구의 과반수(전체 청년인구의 52.0%)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경기도는 2010년 이후로 줄곧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25.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특별시(20.8%)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음.

〈표 2〉 시·도별 청년인구 분포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명,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1월	
	행정구역별	비중	행정구역별	비중	행정구역별	비중	행정구역별	비중	행정구역별	비중
	전국	100.0	전국	100.0	전국	100.0	전국	100.0	전국	100.0
1	서울특별시	23.7	서울특별시	23.4	경기도	23.7	경기도	24.5	경기도	25.3
2	경기도	19.2	경기도	22.0	서울특별시	22.4	서울특별시	21.0	서울특별시	20.8
3	부산광역시	8.1	부산광역시	7.5	부산광역시	7.0	부산광역시	6.7	부산광역시	6.5
4	경상남도	6.0	경상남도	5.9	경상남도	5.9	경상남도	6.0	경상남도	6.1
5	대구광역시	5.6	인천광역시	5.4	인천광역시	5.7	인천광역시	5.8	인천광역시	5.9
6	경상북도	5.4	대구광역시	5.3	대구광역시	5.0	대구광역시	4.9	대구광역시	4.8
7	인천광역시	5.3	경상북도	4.9	경상북도	4.8	경상북도	4.7	경상북도	4.6
8	전라북도	3.8	충청남도	3.7	충청남도	4.0	충청남도	4.0	충청남도	3.8
9	전라남도	3.7	대전광역시	3.4	대전광역시	3.4	대전광역시	3.4	전라북도	3.3
10	충청남도	3.6	전라북도	3.3	광주광역시	3.3	전라북도	3.3	전라남도	3.2
11	광주광역시	3.2	광주광역시	3.3	전라북도	3.3	광주광역시	3.2	대전광역시	3.1
12	대전광역시	3.2	전라남도	3.0	충청북도	3.0	충청북도	3.1	광주광역시	3.0
13	충청북도	3.1	충청북도	2.9	전라남도	2.7	전라남도	2.9	충청북도	3.0
14	강원도	3.0	강원도	2.8	강원도	2.7	강원도	2.8	강원도	2.7
15	울산광역시	2.2	울산광역시	2.2	울산광역시	2.2	울산광역시	2.4	울산광역시	2.4
16	제주도	1.1	제주도	1.0	제주도	1.0	제주도	1.1	제주도	1.2
17							세종특별자치시	0.4	세종특별자치시	0.4

주: 비중=시도별 청년인구수/전국 청년인구수*100; 청년(15~34세), 2000년도는 연령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5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1월)」, 2017.

- 경기도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변화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적인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모두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출입으로 인한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약 9.5만 명 임.
- 특히 2015년 기준 경기도 전·출입 인구의 약 35%는 청년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 기준으로 약 70.8만 명이 경기도로 유입되었으며, 66.8만 명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 경기도 전·출입 인구 이동에서 수도권 내 서울특별시로의 인구 이동도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으로의 전·출입 인구와 마찬가지로 이동인구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음.
- 경기도는 유출 인구에 비해 유입 인구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서울특별시로 유출되는 인구 중 청년인구의 비중이 41.4%로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 청년인구 전출입 변화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전출지 ⇒ 전입지	전체	청년인구	전체	청년인구	전체	청년인구
전국 ⇒ 경기도	2,197,321	896,443 (40.8)	2,168,820	803,483 (37.0)	1,993,080	708,358 (35.5)
경기도 ⇒ 전국	2,028,470	794,580 (39.2)	2,026,383	732,417 (36.1)	1,898,312	668,356 (35.2)
서울특별시 ⇒ 경기도	414,621	180,432 (43.5)	410,735	158,410 (38.6)	324,287	117,034 (36.1)
경기도 ⇒ 서울특별시	311,892	131,521 (42.2)	285,963	113,212 (39.6)	239,557	99,120 (41.4)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각년도)」, 2017.

나. 청년 고용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청년 니트는 한국의 경우 특히 고학력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20~30대 청년의 고용률은 40대에 미치지 못함”

-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청년이 직면한 현실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개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국의 경우 특히 고학력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OECD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청년층(15~29세) 중 니트의 비중은 18.05%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함.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청년들이 실업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취업준비나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됨.

〈표 4〉 OECD 주요국가의 청년실업률 및 청년니트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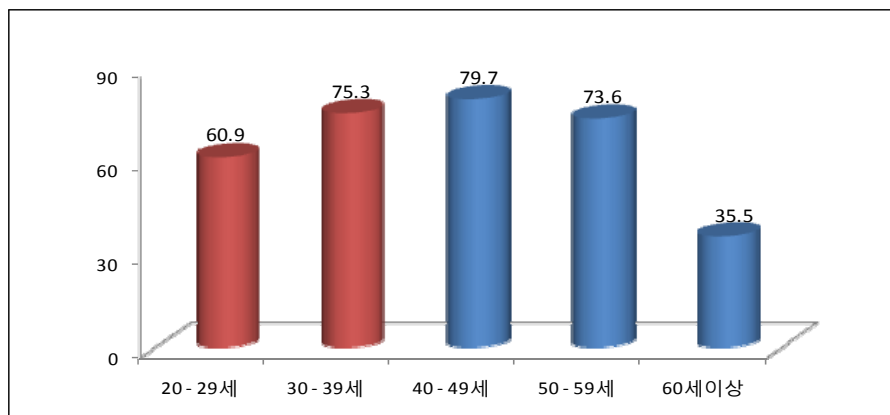
실업률 / 니트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청년실업률 (15~24세)	OECD평균	39.13	39.14	39.18	39.66	40.20
	한국	23.05	24.24	24.15	25.77	26.90
	일본	38.85	38.48	39.72	40.34	40.67
	영국	45.80	46.20	46.25	48.00	50.02
	프랑스	29.60	28.55	28.38	28.00	27.90
	독일	47.92	46.60	46.88	46.05	45.30
	미국	45.45	45.98	46.49	47.64	48.61
청년니트 비율 (15~29세)	OECD평균	15.75	15.01	15.58	15.15	14.52
	한국	18.79	18.47	18.05	—	—
	일본	11.71	11.50	10.83	9.82	—
	영국	15.50	16.29	15.59	14.40	13.74
	프랑스	16.41	16.58	16.34	16.25	17.20
	독일	11.00	9.94	9.68	9.17	8.57
	미국	15.85	15.20	16.00	15.05	14.38

자료: OECD(<https://data.oecd.org/>).

- 한편 경기도 청년의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대와 30대 청년의 고용률은 40대에 미치지 못함.

〈그림 1〉 경기도의 연령별 고용률(2016)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2017.

2. 경기도 청년 생활 실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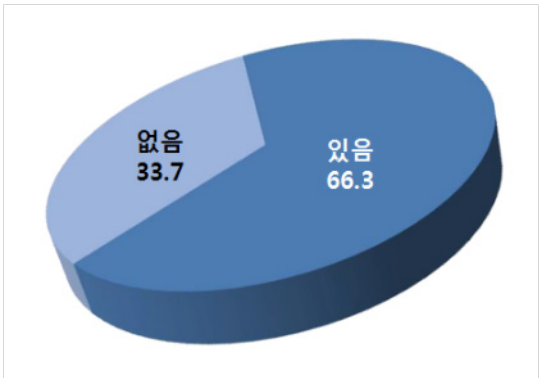
가. 취업 및 향후 진로

“구직 경험이 있는 청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의 장기 구직 경험을 갖고 있으며, 16.9%의 청년이 나의 적성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적성파악의 선결과제를 보여줌”

- 전체 응답자의 약 2/3인 66.3%가 구직 활동 경험이 있었고, 이들의 구직기간은 6개월 이내 32.8%, 6개월~1년 30.7%, 1년 이상 36.6%로 나타나 장기 구직 활동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 구직활동 경험 여부(N=1,200)

(단위: %)



〈표 5〉 구직활동 기간

(단위: 명, %)

기간	빈도(비율)
6개월 이내	261 (32.8)
6개월~1년	244 (30.7)
1년~2년 미만	159 (20.0)
2년 이상	132 (16.6)
전체	796 (100.0)

자료 : 양정선 · 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으로는 과도한 스펙 경쟁(41.8%)과 취업할 만한 일자리 부족(41.5%)이 많이 지적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16.9%, 학생의 22.3%가 나의 적성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적성 파악의 선결과제를 보여줌.

1) 양정선 · 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 20~34세의 경기도 청년 1,2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표 6〉 취업 준비 및 구직 활동 과정에서 어려운 점(중복응답)

(단위: 명, %)

어려운 점	학생 (N=377)	취업준비생 (N=185)	전체 (N=1,200)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함	135 (35.8)	87 (47.0)	498 (41.5)
과도한 스펙 경쟁의 어려움	177 (46.9)	78 (42.2)	502 (41.8)
학원등록, 시험응시 등 취업 관련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움	61 (16.2)	34 (18.4)	170 (14.2)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함으로 인한 어려움	42 (11.1)	24 (13.0)	98 (8.2)
나의 적성을 잘 알지 못함	84 (22.3)	19 (10.3)	203 (16.9)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67 (17.8)	28 (15.1)	207 (17.3)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31 (8.2)	18 (9.7)	139 (11.6)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기 어려움	61 (16.2)	39 (21.1)	232 (19.3)
사회봉사 또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부족함	13 (3.4)	6 (3.2)	41 (3.4)
직무 관련 자격증의 부족	26 (6.9)	12 (6.5)	108 (9.0)
전체	697 (184.9)	345 (186.5)	2,198 (183.2)

자료 : 양정선 · 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향후 진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9%가 취업 하겠다(또는 현재의 취업유지)고 응답하였고, 13.5%가 창업, 29.4%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직장인은 5명 중 1명 이상(21.2%)이 향후 5년 후에는 창업을 하겠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7〉 진로의 방향

(단위: 명, %)

주된 역할	취업	창업	프리랜서	사회활동가	모르겠다	전체
학생	205 (54.4)	28 (7.4)	23 (6.1)	13 (3.4)	108 (28.6)	377 (100.0)
직장인	191 (39.4)	103 (21.2)	41 (8.5)	5 (1.0)	145 (29.9)	485 (100.0)
취업준비생	129 (69.7)	11 (5.9)	13 (7.0)	5 (2.7)	27 (14.6)	185 (100.0)
휴직 중	15 (31.2)	5 (10.4)	5 (10.4)	2 (4.2)	21 (43.8)	48 (100.0)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10 (13.0)	11 (14.3)	12 (15.6)	0 (0.0)	44 (57.1)	77 (100.0)
전체	550 (46.9)	158 (13.5)	94 (8.0)	25 (2.1)	345 (29.4)	1,172 (100.0)

자료 : 양정선 · 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현재 마땅한 역할이나 소속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과반수(57.1%)와 휴직자의 43.8%가 진로의 방향을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로 현재의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보여줌.

나. 주거 및 교통

“주거 독립한 청년의 12.3%는 대출이나 빚으로 주거비를 충당하여 학자금뿐만 아니라 주거비 마련에서도 채무부담이 가중되며, 조사대상 청년의 79.1%가 장거리 통학 및 통근”

- 조사 응답자의 약 30%가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주택점유는 월세(46.3%), 전세(34.2%), 자가(15.1%) 등으로 나타남.
- 주거 독립한 청년의 41.1% 부모가 청년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12.3%의 청년들은 대출이나 빚으로 주거비를 충당하여 학자금뿐만 아니라 주거 마련에서도 채무의 부담이 가중됨(〈표 8〉 참조)을 알 수 있음.

〈표 8〉 주거비(보증금/전세금/월세금/관리비 등) 조달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부모님이 지원	74 (20.7)
스스로 조달	159 (44.5)
대출이나 빚으로 충당	44 (12.3)
무상으로 거주	7 (2.0)
부모님 지원+스스로 충당	73 (20.4)
전체	3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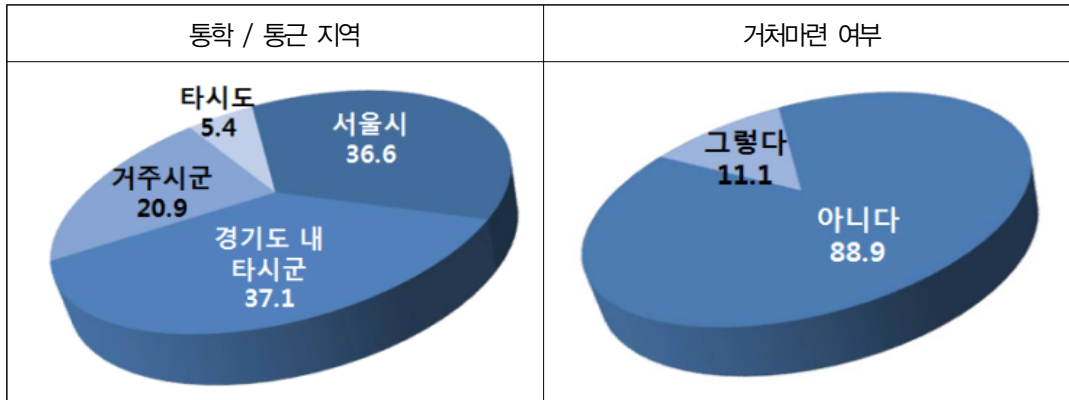
자료 : 양정선 · 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조사대상자의 79.1%는 장거리 통학 및 통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2%의 청년들이 서울과 타 시도로 통학 및 통근을 하고 있으며, 37.1%는 거주 시군 이외의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생활을 함.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거처를 따로 마련한 청년은 11.1%로 나

타남(〈그림 3〉 참조).

〈그림 3〉 통학 / 통근 지역과 거쳐 마련 여부

(단위: %)



자료 : 양정선 · 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다. 경제생활

“조사 대상 청년의 21.9%가 현재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인은 교육비(48.3%)가 가장 많았고, 주거비(36.5%), 생활비(28%) 마련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 응답자의 59.8%가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였고, 33.8%의 응답자가 부모 · 형제 등의 용돈으로 충당하였음. 뚜렷한 소속이나 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 있는 청년인 경우 과반수(50.6%)가 용돈에 의지하고 있음.
- 전체 조사대상자의 21.9%에 해당하는 청년이 현재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부채액은 평균 2,657만원이었음. 학생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휴직 중이거나 직장인인 경우 부채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표 9〉 참조)
- 부채의 주된 원인은 교육비(48.3%)가 가장 많았고, 주거비 마련(36.5%), 생활비(28%)의 순으로 나타남.

〈표 9〉 부채 여부 및 평균 부채액

(단위: 명, %, 만원)

구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부채 평균
학생	42 (11.1)	335 (88.9)	1,213.47
직장인	148 (30.5)	337 (69.5)	2,945.64
취업준비생	35 (18.9)	150 (81.1)	1,591.00
휴직 중	15 (31.2)	33 (68.8)	6,122.83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13 (16.9)	64 (83.1)	1,721.54

자료 : 양정선 · 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청년 3명 중 1명 이상(36%)은 미래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포기했다는 청년은 20.5%, 결혼 25.4%, 출산 20.2%로 나타나, 과거 일정 시기에 치렀던 통과 의례가 비관적으로 인지되고 있음.

〈표 10〉 현재 포기하고 있거나 향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연애	141 (11.8)
결혼	305 (25.4)
출산	242 (20.2)
내 집 마련	432 (36.0)
대인관계	68 (5.7)
안정적인 일자리	246 (20.5)
학업	89 (7.4)
없음	363 (30.3)
전체	1,886 (157.2)

자료 : 양정선 · 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라. 여가 및 문화생활

“청년들이 현재 즐기는 여가로 여성 응답자는 휴식과 수면을 남성 응답자는 스포츠 활동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청년층을 대변하는 문화로는 SNS 문화를 가장 많이 꼽음”

- 청년들이 현재 즐기는 여가로 여성 응답자는 휴식과 수면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남성은 스포츠 활동을 꼽았음.

〈표 11〉 현재 즐기는 여가생활(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지역		성별		연령		
		도시	도농/농촌	여성	남성	20-24세	25-29세	30-34세
스포츠 활동	15.2	15.4	14.7	6.3	24.0	15.5	15.0	15.0
스포츠 관람	9.4	9.6	8.9	3.7	15.2	10.3	9.5	8.5
문화예술 공연관람	18.7	19.6	16.4	25.7	11.7	17.8	18.0	20.3
봉사활동	1.9	2.0	1.7	2.2	1.7	2.0	1.3	2.5
자기계발·독서	11.0	11.1	10.8	15.3	6.7	11.5	10.3	11.3
여행·관광	18.5	19.8	15.6	22.3	14.7	19.5	17.0	19.0
사교·유흥	10.8	12.0	7.8	11.0	10.5	10.3	10.3	11.8
PC·앱 게임/검색	17.5	18.0	16.4	11.3	23.7	16.8	18.0	17.8
TV 시청	15.9	16.2	15.3	17.8	14.0	18.3	13.8	15.8
휴식·수면	21.3	22.6	18.3	26.7	16.0	22.0	21.0	21.0
종교활동	6.8	5.2	10.3	7.7	5.8	5.3	7.8	7.3
전체	146.9	151.5	136.1	150.0	143.8	149.0	141.8	150.0

자료 : 양정선·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청년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 및 영상(35.3%), 음악(21.8%), 축제(16.2%)의 순으로 나타나 보편적이면서 다수가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을 희망하였음.
- 청년층을 대변하는 문화로는 SNS 문화(72.2%), 모바일 문화(50.8%), 음주 및 유흥문화(36.2%)를 들었음.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술과 그에 뒤따르는 유흥문화를 청년문화라고 언급하여 우리 사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음주 문화가 청년 사회에서도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줌.

3. 중앙정부 청년정책

“새정부 청년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강한 방점을 찍고 있으며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청년의 역할 기대”

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의 청년대상 정책은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이 해당됨.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 및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임.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중임.
 -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 하는 것으로, 2017년 5천명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신규 2만명을 지원 함. 이를 위해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2017~2018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며, 2020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임. 이를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 중임.
-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청년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정부 지원 방향은 청년을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청년 과학기술 인력과 청년 농업인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됨.
 -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임.

-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를 지원하며,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청년 농업인 지원) 2018년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여,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 125천원씩 2년 동안 3,000천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6,000천원(정부 9,000천원, 기업 4,000천원)을 돌려받는 고용안정 제도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임. 이를 위해서 4.1조원의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청년 노동기본권 신장) 새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외에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청년 일자리 기본권) 청년들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사업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청년을 비롯하여 취약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2018년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나. 청년 주거부담 경감

- (청년 주거부담 경감) 청년 대상 새정부 정책에서 고용관련 정책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4.4조원의 예산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쉼어형 임대주택(5만실), 역세권 주변 등에 청년주택(20만실) 공급 및 기숙사 확대(5만 명) 등을 시행할 계획임.
 -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층이 대부분인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5년 간 20만호 공급,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한도 및 금리를 대폭 우대하고, 2018년부터는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원씩 2년 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 지금까지의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청년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2〉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의 청년정책

구분	내용	주요사업	소관부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 추가고용장려금 신설(2.4조원)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1.3조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4.1조원)	고용부
	청년과학자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보장 의무화 • 미취업 석·박사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미래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0.4조원) •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농식품부
청년 주거부담 경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강화(4.4조원)	국토부

4. 민선 7기 경기도 청년정책 제안

“영역이 아닌 청년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는 특정 분야만 포함될 수 없으므로,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에서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시키고 틈새를 보완하는 청년 대상의 전방위적 지원정책 추진 필요”

가. 수요(기업)–공급(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임.
 -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일자리 경험에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을 선호하지 않고, 청년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함.
 -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청년들이 취

업 준비 및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과도한 스펙 경쟁의 어려움(41.8%)과 취업할 만한 일자리 부족(41.5%)으로 나타나,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²⁾.

- 중소기업의 기업 중에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못지않은 근로자 복지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도 많으며, 경기도의 특성 상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개인의 적성과 성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으질 수 있음.
- － 중소기업 기업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기업들이 원하는 직무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13〉 지역별 청년친화강소기업 현황(2018년 선정기업 포함)

(단위: 개소, %)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북	전남 광주	대전 충청 세종	제주
기업 수	1,106	324	43	326	24	119	82	13	43	126	6
(%)	(100)	(29.3)	(3.9)	(29.5)	(2.2)	(10.8)	(7.4)	(1.2)	(3.9)	(11.4)	(0.5)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

2) 정책과제

- 경기도 소재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등의 경기도 특화 기업인증사업에서 인증 받거나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함.
-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 1,106개소가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29.5% (326개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음.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워크넷 홈페이지³⁾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0일부터는 해당 기업의 임금 정보, 일·생활균형 지원, 청년 근로자 비율 등 선정 심사의 기초가 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공개될 예정임.

2) 양정선·김다경(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3) <http://work.go.kr/gangso>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선정된 후 유효기간(1년) 동안 채용지원과 기업 홍보,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경기도에서는 1월에 공개되는 정보 수준을 파악하여 경기도 인증기업들을 포함하여 별도의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기업 대상의 채용지원과 기업 홍보를 지속함으로써 청년 구직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여 현장중심형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기업수요와 인력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재교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
 -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선정하고 기업이 참여하여 해당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과 운영을 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직접 신규인력 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 청년여성 일경험 실태조사(최운선·남승연, 2016)⁴⁾ 결과에서는 경기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일 경험 확대(50.1%)로 조사되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나. 청년 창업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개수에는 제한이 있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고려하게 되며, 원하는 일자리가 아닐 경우 실업자로 남게 됨.
 - 경기도 청년들의 경우에도 학생 중 54.4%가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고, 창업(7.4%)과 프리랜서(6.1%)를 고려하는 경우는 소수로 나타났으며,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69.7%라는 절대다수가 취업을 위한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양정선·김다경, 2017).
 -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39.4%만이 취업(이직)의 진로를 계획하고 있고, 21.2%가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성에 맞는 일을 나중해야 계획하고 찾는 것으로 파악됨.
- 이미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업터,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등 정책들은 다양하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관련 사

4) 최운선·남승연(2016). 「청년여성 일경험 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업이나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에서도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 청년따복공동체사업, G-NEXT (게임 산업육성), 경기문화창조허브(청년창업지원),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청년창업 SMART 2030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경기도 청년의 78.2%가 정부 또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사업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양정선 · 김다경, 2017) 정책홍보가 필수적인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여러 다양한 부처(부서) 및 기관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교육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만 창업 이후 안정적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안정적 · 도전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홍보와 판로개척, 사업자금 편당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정책과제

- 홍보 효과가 우수한 G-Bus의 광고게시 우선권을 청년 사업가들에게 제공하여 소자본의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함.
 - 초기 창업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을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G-Bus를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년창업가의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러한 홍보는 취업만 생각하고 창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파급력을 가짐.
- 청년 창업가들이 크라우드펀딩을 받고 통합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 창업 관련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함.
 - 소자본으로 창업한 청년 사업가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원은 사업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만 이후 사업 지속성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년창업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 청년 생활안정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경기도 청년들은 교육비와 주거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평균 2,657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원인은 교육비(48.3%), 주거비(36.5%), 그리고 생활비(28.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악순환(양정선 · 김다경, 2017).
- 또한, 학생(11.1%)보다는 휴직자(31.2%)와 직장인(30.5%)들 중에 부채를 보유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향후 내 집 마련(36.0%)이나 부채 상환을 지원하거나 부채의 원인이 되는 지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에서 필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욕구 외에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 욕구가 큰 상황임.
- 경기도 청년들의 정책 욕구 1순위는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정책(59.9%)이었고, 뒤를 이어 주거 · 임대정책(47.7%)과 생활비 지원정책(40.2%)으로 나타났다(양정선 · 김다경, 2017).
- 이러한 욕구는 청년대상 일자리 지원과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정부 정책 기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와 함께 주거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과제

- 장기 부채 보유 청년이 신용하락의 위험을 낮추고 스스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재무설계 및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함.
- 2년 이상 장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및 생애주기 설계 상담을 지원함.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취 · 창업)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및 취 ·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재무설계 계획 실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주거지원 관련 파복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기도에서는 BABY2+파복하우스, 송파학사, 파복기숙사, 대학생 공유기숙사 등을 통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BABY2+파복하우스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생들의 주거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과 직주 접근성 강화를 위해 BABY2+파복하우스의 사회초년생 대상 물량을 확대하고 청년 대상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청년 문화·여가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기본적인 경제적 조건의 충족은 삶에 대한 불만족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여가 및 안전·복지 등에서의 충족이 필요함.
 - 경기도 청년들 중에서는 현재 즐기는 여가생활로 휴식·수면을 꼽은 경우가 2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행 및 관광(18.5%), PC·앱 게임/검색(17.5%)의 순으로 나타나(양정선·김다경, 2017), 청년들의 문화·여가생활이 매우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새정부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주거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나 여가지원은 없고 경기도 청년정책 역시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문화나 여가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들의 생활비·교육비·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 감소가 필요하며, 혼자보다 함께하는 문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청년들은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 부족(34.4%)과 비용부담(30.9%)을 꼽았고,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청년이 42.4%로 조사됨에 따라(양정선·김다경, 2017), 근거리에서 저비용으로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청년희망재단의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 청년의 60.1%는 혼자가 편해서 63.2%가 혼밥과 혼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74.2%는 인간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이영민 외, 2017)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과제

- 경기도 청년들이 경기도 내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기 청년 문화 거리를 조성함.
 - 서울의 신촌 거리처럼 청년들의 집결지가 될 수 있는 거리 및 거리축제 문화를 조성함.
 - 거리의 점포 및 판매대를 청년창업가들이 직접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버스킹·청년 영상축제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여 청년문화거리 조성과 청년 창업을 연계함.
- 청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따복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 활동 및 공간 등을 지원함.
 - 지원받은 동아리 활동의 결과 및 작품을 경기 청년문화 거리에서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경기도 내 문화예술 공연장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 대상으로 입장석의 일부에 한해 50% 할인을 적용함.
 - 경제적 이유로 공연문화 관람이 어려운 경기도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마. 청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 이것이 반영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청년 대상의 수요 맞춤형 일 경험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갖추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2) 정책과제

-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활동 활성화로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강화함.
 -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 연간 계획 및 중간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청년정책 환류 점검에 주점을 두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킴.
- 경기도 일자리 재단 내에 ‘청년 일 경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 경험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 알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청년들의 일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하고, 일 경험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리를 알선하며, 기업(기관)이 원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청년들 대상의 교육 훈련을 연계하는 등 청년 일 경험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 지금까지 민선 7기 경기도 청년정책 제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4〉 민선 7기 경기도에 바란다: 청년정책 제안

